

다산포럼



이남주 성공회대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18일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왕이(외교부장 겸임)와 인도 국가 안보보좌관 아지트 도발이 23차 국경문제 특별대표회담을 진행했다. 2019년 12월 회담 이후 5년 만에 개최되었는데, 다음 특별대표회담을 2025년 인도에서 진행한다는 것을 포함해 국경 관리, 변경 교류와 관련된 6개 항의 합의를 발표했다. 두 글로벌 대국의 관계 개선은 국제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3500km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했다. 국경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2020년 6월 갈라니계곡에서 1962년 국경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유혈 충돌이 발생하며 중-인관계는 1990년대 이후 가장 악화되었다. 인도는 투자 제한, 수입 규제, 중국 앱 퇴출 등의 대중 제재를 가하고, 쿼드(미국, 인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4개 국가의 협력 기구) 참여 등으로 미국의 대중견제 정책에 적극 협력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안보환경은 더 악화되었고 미국에게는 큰 선물이 되었다.

해발 4000미터 이상의 고도,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

중국-인도 관계 개선과 국제질서 변화

가는 악천후 등으로 접근이 매우 어려운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경분쟁 실상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2년 국경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지리적 접근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던 인도가 분쟁지역에서 점령을 확대해왔고, 2010년대 들어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화된 중국이 변경 지역에 대한 보급을 강화하고 반공에 나서면서 분쟁 강도가 높아졌다. 2020년에 중국이 공세를 강화했는데, 2019년 인도가 헌법 개정으로 분쟁지역에 인접한 카슈미르와 라다크 지역의 자치권을 취소하고 직할령으로 전환시킨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공방전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했고, 인도는 2020년 이전 상태로의 복귀를 중-인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

당시 서부 변경에서 대립이 출현했던 6곳 중 4곳은 2022년 9월까지 완충지역을 정하고 완충지역에서 중국과 인도의 군인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2곳, 특히 전략적으로 민감한 뎃상평원 문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10월 21일 인도 외교부가 대립 해소 방안이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중국 외교부도 진전을 인정하며 상황이 극적으로 전환되었다. 합의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완충지역을 설정하고 양측이 완충지역에서 시간차를 두고 순찰을 진행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분쟁 해결과 거리가 있지만 충돌 방지와 병력 감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다.

10월 23일에는 러시아 카잔에서 진행된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과 모디가 5년 만에 중

·인정상회담을 갖고 중-인관계 정상화 방침을 천명했다. 합의의 실천에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번 특별대표회담으로 합의가 순조롭게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변화에는 경제 요인과 안보 요인이 모두 작용했다. 경제적으로는 이 지역에 병력을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인도에서는 중국과의 경제관계 악화로 투자 감소, 원자재와 중간재 공급 부족 등의 문제도 출현했다. 경제계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 중국으로서도 인도 시장을 잃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적 차원에서는 인도와 미국 관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인도에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하고 인권 문제와 관련한 갈등은 증가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인도양에서 인도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인도가 미국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국의 안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중국과 인도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이웃의 대국과 적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중인관계 개선의 가장 주목할 결과는 글로벌 사우스를 이끄는 브릭스나 상하이협력기구의 응집력이 강화되고 국제질서 다극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지금 중-인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도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석열 정부의 진영 대립 외교로 이 흐름에 크게 어긋나 있다. 현재 국내 정치 상황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 역시 탄핵국면을 빠르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꿈꾸는 2040

개구리 죽이기



정준호 국회의원·위민연구원 이사

‘끓는 물 속 개구리’라는 유명한 은유가 있다. 개구리를 잡지 않자 끓는 물에 넣으면 살기 위해 뛰쳐나오지만,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위험한 줄 모르다가 결국 죽는다는 것이다. 서서히 일어나는 심각한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우화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에 끓는 물을 퍼부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선언했고, 입법부에 무장한 공수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다. 특정인을 사살하려 했다가거나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엄청난 내란 시도는 불과 수 시간 만에 진압됐다. 민주주의를 체화한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천천히 끓는 물로 다시 이 위험하고 냉혹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내각

총사퇴도 모자랐을 판에 여전히 총리직을 유지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엄을 옹호하는 비열함을 보였다. 내란 물증을 확보하려는 수사기관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는 그 여타한 조치도 받지 않았고, 국회가 의결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은 공포는 고사하고 국무회의조차 오르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적극적으로 행사되었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요청은 즉시 거부되었다.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다.

특히 그 무엇보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온 국민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이끌어 낸 이유는 계엄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밝히기 위함이었다. 말도 안되는 내란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자들을 법률 절차와 민주주의의 힘으로 엄중히 단죄하기 위함이었다.

내란에 침묵만 했던 내각이 대해 언제부터 조정자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말인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궤변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내각에 앉은 국무위원 중에 야당 동의 없이 대통령이 밀어붙인 사람이 어디 한 두 명인가. 독도 문제가 한-일 합의의 문제가 아니고 동북공정이 한-중 이해의 문제가 아니듯 내란죄 처

벌 또한 합의사항이 아니다. 점잖은 척 진중환 척 걸으면 공정한 저 논리는 실상 내란 옹호에 불과하다.

천천히 끓는 물은 끓인 물보다 더 치명적이다. 헌정 질서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내각, 국민의힘 여당의 내란 무마 삼각편대는 이미 작업을 시작했다. 대통령 측은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합법성을 주장하며 수사와 재판에 일체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헌법재판관 표결에 불참하고 한 대형 탄핵의 정족수 높음을 하며 어떻게든 사태를 지연시키려 혈안이 되었다. 한 대형을 비롯한 내각은 마치 내란이 아무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사회안정을 운운하며 국민의 기억을 지우려 하고 있다. 12월 3일 실패로 끝났던 그 내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길은 하나뿐이다. 국민들보다 위에 있는 정치인도 없으며 나라보다 중요한 정권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의 파산이 우리 헌정 질서의 파산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내란세력의 요릿감이 아니고, 우리 민주주의는 눈이 먼 개구리가 더더욱 아니다. 지금도 물을 타며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저 저급한 요리사들에게서 이제는 칼을 뽑아야 할 때다. 그 누구도 탄핵심판을 방해하지 말라.

20·30 여성의 탄핵집회 참가율이 높은 이유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의 퇴진, 동조세력인 국민의힘 해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들끓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집회시위에 20·30 MZ세대 여성들의 높은 참여율(30%에 육박)을 두고 정치적 사회참여에 무관심한 줄 알았던 MZ세대들에게 희망을 보았다며 기특하다거나 MZ세대 남성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여론의 못매를 맞기도 했다. 20·30 MZ세대 여성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기성세대에게 기특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것도, 영웅심리 발로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실정과 내 삶으로부터 경험한 불평등과 차별, 불안과 공포,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광장 민주주의의 한복판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함이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선언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소위 ‘이대남-이대녀의 젠더 갈라치기’ 선거 전략을 통해 집권하였다. 집권 이후에도 여성과 젠더, 성평등을 지우고 관련 정책을 축소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작년 6월, 유엔개발계획(UNDP)의 젠더사회규범

지수(GSNI) 보고서는 한국이 조사대상 37개국 가운데 성평등에 반하는 편견이 가장 많이 심화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성에 대한 편견이 없는 한국인의 비율은 10.12%에 그쳐 성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인 스웨덴 68.24%, 뉴질랜드 65.56%와 극명하게 대조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성평등 인식 수준은 후퇴하고 성평등에 대한 반발은 급격히 증가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가져왔다.

성평등 인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성차별을 감지하는 능력인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국정운영이 필수적임에도 사회 각 분야의 높은 성별 격차, 성별 임금격차 1위,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지수,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성차별 문화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입증하는 수많은 국제적, 객관적 데이터들을 외면하고 왜곡했다. 그 사이 한국의 성평등 민주주의는 최소 10년은 후퇴했고 여성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저 여자라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과 불법 촬영, 감금 및 죽임을 당하는 페미사이드 현상 앞에서 분노와 공포를 넘어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연대의식이 형성되지 않을 수 없었다.

20·30 MZ세대 여성들의 높은 탄핵집회 참여율은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의식과 사회 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4.19혁명, 5.18민중항쟁, 1987년 민주화 대투쟁 등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독재와 불평등 및 불의에 맞서 늘 광장에 있어 왔다.

특히 20·30 여성들은 청소년기에 2008년 광우병 촛

불집회를, 8년 전 박근혜 정부 퇴진 집회를 경험하고 주도한 세대이다. 그들은 광장민주주의를 온 몸으로 체험하면서 역사의 주연인이 아닌 주체로 변화되어 갔다. 촛불 및 민중가요 대신 응원봉과 K팝으로 무장한 새로운 K집회 문화를 만들어 냈다는 것에 열광하거나 주목하기 보다는 20·30 여성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어떤 사회를 바라고 있는지에 더욱 주목해야 할 때이다.

탄핵 정국은 신속히 종결되어야 하며 그 책임자들에게 대한 철저한 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각성도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민주주의 정책의 퇴행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성평등 정책은 주요한 쟁점 사항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탄핵정국에서도 고금리, 고물가의 경제 위기, 안보 위기,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의 답론만 지배적이다.

이러한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조기 대선과 2년 후 지방 선거에서는 청소년, 청년들이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정의와 평등의 가치가 살아있는 사회,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국정 의 주요 가치와 방향으로 설정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들어서길 기대해 본다. 20·30 여성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요 국정 및 지방정부 과제로 제시하는지 지켜 보고 연대할 것이다.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희생된 179명의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대한민국이 안전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社說

제주항공 참사 무안공항 시설 안전화 계기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빨라야 6개월 후에도 나올 것이지만 이번 참사를 무안공항의 시설 안전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참사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의 하나로 무안공항의 구조물과 시설을 꼽고 있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짧은 활주로는 근본적인 개선 요인이다.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2.8km로 인천(3.75km), 김포(3.6km) 등 타 공항에 비해 턱없이 짧다. 국토부는 더 짧은 지방공항을 사례로 들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영상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동체착륙과 같은 비상착륙시 짧은 활주로는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사고 여객기는 활주로 3분의 1 지점에 동체착륙을 시도했지만 짧은 활주로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로컬라이저) 인턱에 부딪혀 참사가 벌어졌다. 더구나 활주로 확장공사 탓에 실제 활주로는 300m가 줄어든 상태였다.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에도 귀기

울여야 한다. 공항 측이 지난해 로컬라이저 교체 작업을 하면서 활주로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둔덕을 설치했는데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쉽게 부러지거나 접히는 형태로 만들어 활주로 이탈 시 기계 손상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만큼 꼭 개선해야 할 구조물이다.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무안공항 근처에는 조류 서식지가 4곳이나 돼 평소에도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이 컸고 실제로 국내 공항 가운데 사고도 가장 많았다.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는 조류 충돌 위험성이 크다며 폭풍이나 경보기 설치, 레이저나 LED 조명 등을 이용해 조류 충돌을 최소화 하라고 권고했지만 활주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무안공항은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으로 설계됐지만 시설과 구조물, 운영 측면을 보면 부족하거나 미흡하기 그지 없다. 이번 참사를 시설 안전화의 계기로 삼아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역편혜로 지역민 집단 트라우마 키워서야

최악의 국내 항공기 사고로 기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지켜본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영상 속 사고 장면도 충격적이지만 희생자 179명 가운데 157명이 지역민일 정도로 ‘한 다리 건너면 지인’이라는 믿기지 않은 현실 때문이다.

희생자들의 안타깝고 가슴 아린 사연을 주변에서 듣다보니 유가족은 아닐지라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1980년 5월 악몽을 떠올리게 한 ‘12·3 비상계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역에서 믿기지 않는 대참사가 발생해 가족 한 세밀이라는 한탄을 쏟아내고 있다. 10년 전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만큼 불의의 안전사고로 인해 지역민들의 집단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집단 트라우마 속에 지역민들은 저마다

의 방식으로 애도하고 있는데 유가족이나 지역민들을 조롱하는 일부 악플러들이 활개치고 있다니 통탄할 일이다.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황체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논란을 일으켰다. ‘보상금 받을 생각이 속orous는 형식방글일듯’이라며 유가족을 조롱하는 게시물도 문제지만 일부는 악플을 달아 공분을 사고 있다. 사고 장소인 무안공항에 주목해 지역을 비하하는 누리꾼의 댓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지역을 폄하하는 행위를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포털 등 커뮤니티 관리자들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도 없고 악플 작성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사급히 마련해야 한다. 인터넷 존심명제 도입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는데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살려야 한다.

無等鼓

프란치스코 교황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聖門)을 열고 2025년 가톨릭 희년(禧年)의 시작을 알렸다.

25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은 가톨릭교회에서 신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를 의미한다. 2025년 희년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지난 2000년 대 희년을 기념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 희년이다.

가톨릭교회는 1300년(보니파시오 8세 교황)부터 50년마다 희년을 기념하기 시작했는데, 1475년부터 25년 주기로 줄었다. 모든 세대가 최소한 한 번 희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희년에는 빛을 진 사람이 탕감받고 노예는 해방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법에 따라 50년마다 한 번씩 축제를 열었는데, 이때 모든 빛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의미를 고려하면 희년은 억압받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해방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다난한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특히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선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국민 뜻을 외면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면서 시간을 끄는 행태를 보이는 국무위원들과 국민의 힘 의원들에 분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냈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이 ‘총을 쏘더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발표 명령까지 내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돌이켜보면 올해에는 다음 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채해병 사건의 징계 무마 의혹이다, ‘명태군 게이 트’가 터지더니 비상계엄까지 선포됐다.

희망은 힘이 세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유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뒤 전화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희망을 필요로 하는 때다. 교황도 2025년 희년의 주제를 ‘희망의 순례자’로 정했다. 혼란을 끊어내고 비정상적 정치권력에서 해방되는 희년을 맞자. /김지를 정치부 부장 dok2000@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